

A-S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

2001.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장

정 도 영

제1장 폐기물관리 현황

1. 폐기물문제의 발생과 정책적 대응

사람의 소비활동이나 생산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된 물질이라고 정의되고 있는 쓰레기의 개념은 보는 시각, 시대 상황, 사회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은 골치아픈 쓰레기로 간주되는 음식물쓰레기가 60년대의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가 적고 농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는 소, 돼지 등의 사료나 농업용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었고, 비록 쓰레기가 발생하여도 자연의 자정작용에 의해 자연적으로 소화·흡수되었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생활양식이 대량생산·대량소비 형태로 변화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다량화, 난분해화하여 쓰레기가 자연의 자정작용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자연계가 스스로 정화할 수 없는 폐기물은 매립장·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이기주의 문제, 엄청난 시설투자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되므로 국가의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폐기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생산·소비문화를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경제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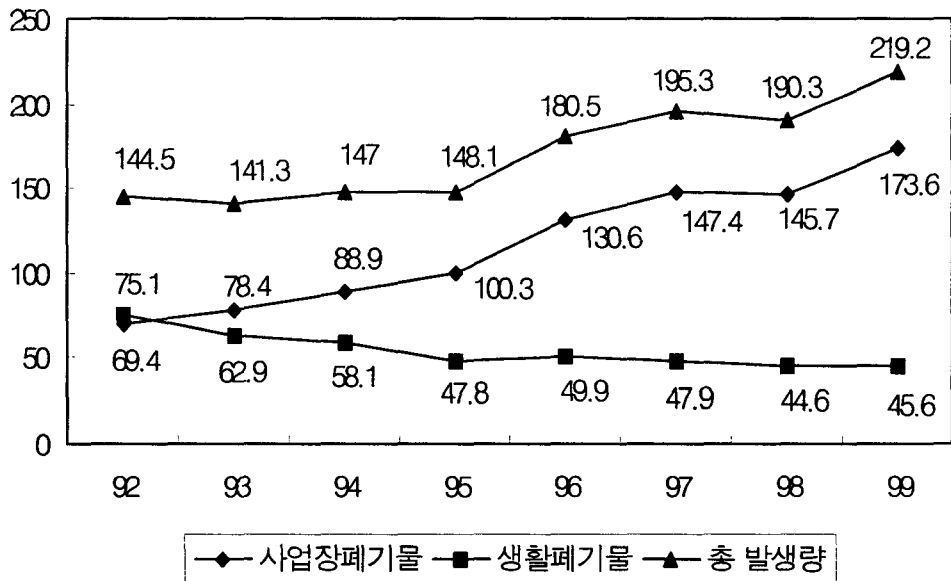
따라서 정부의 폐기물정책은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을 확대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되, 근본적으로는 쓰레기 줄이기가 생활속의 실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나라마다 지형적 여건, 사회·경제적 수준, 문화적 특성 등이 다른 만큼 각국의 현실적 여건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개발·추진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로 인한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 풍성한 상처림 등으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어려움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러한 국토여건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정책의 개발이 요구된다.

2.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체계

가.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우리나라의 폐기물발생량은 '99년말 현재 1일 약 22만톤으로 최근 5년 간 연평균 9.6%씩 증가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은 '95년에 실시한 쓰레기 종량제의 성과와 '98년부터 강화된 1회용품·과대포장 규제정책 등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국토의 단위면적당 쓰레기 부하량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한편 사업장폐기물은 5년간 연평균 14.6%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경제시스템이 자원다소비형 구조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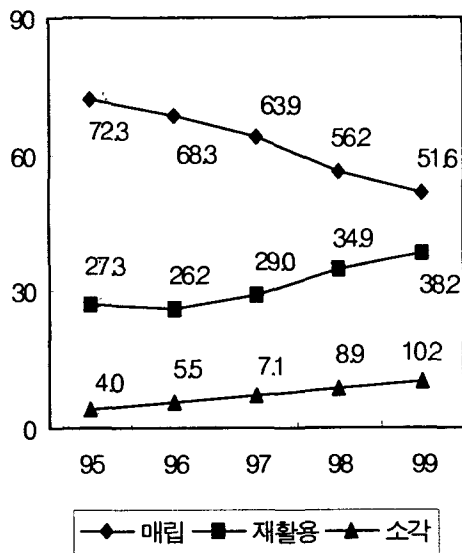
발생된 폐기물은 아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재활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재활용률이 꾸준히 증가하여 '99년말 현재 재활용 65.4%, 매립 24.73%, 소각 6.2%순으로 처리되고 있다.

생활폐기물은 '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분리수거가 활성화됨에 따라 재활용률도 27.3%에서 38.2%로 크게 증가하는 등 재활용률이 크게 향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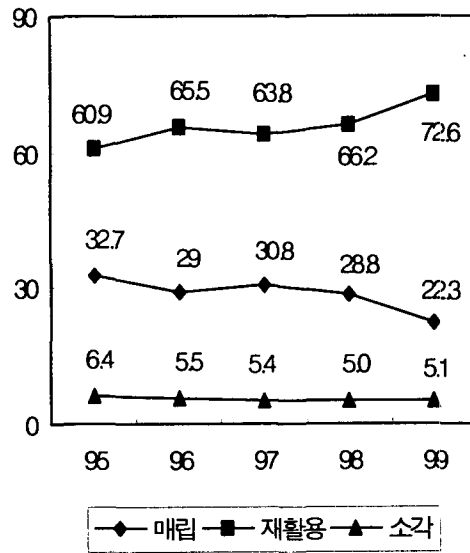
또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율도 소각시설의 확충에 따라 '95년 4.0%에서 '99년 10.2%로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아직 미미한 수준인 반면, 매립률은 51.6%로 선진외국(일본 29.7%, 덴마크 12.4%, 네덜란드 20.3%, 스위스 14.0%)에 비해 아직도 매립의존률이 높아 좁은 국토 현실을 감안할 때 폐기물처리방법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사업장 폐기물은 재활용이 용이한 단일재질이 많은 특성으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에 비하여 재활용률이 높으나 소각률이 낮고 최종처리 방식인 매립(25.2%) 및 해양투기(3.6%)로 상당량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나.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98년말 현재 전국에 운영중인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344개소이며, 이중 70.1%인 241개소가 5년 이내에 사용종료될 예정이다.

구 분	계	3년 이내	4~5년	6~10년	11년 이상
개 소	344	196	45	50	53
면적(천㎡)	30,123	2,910	1,507	2,423	23,283
총용량(천㎡)	412,856	25,460	24,029	27,665	335,693
잔여용량(천㎡)	306,383	6,766	11,768	16,031	271,818

또한 과거 적정한 침출수 차단시설·처리시설 없이 매립한 비위생매립지가 1,072개소에 달하여 이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및 토지이용 피해 등이 야기되고 있다.

계	매립경과년수				토지이용현황			
	5년미만	5~10년	10~15년	15년이상	택지	공장	농경지	나대지등
1,072개	226	538	236	72	54	132	444	442

한편 소각시설은 전국적으로 약 14,791개('98)이나 이중 95%인 14,059개소가 시간당 100kg미만인 소형소각시설이나 소각량에 있어서는 전체의 15.3%에 불과한 실정이다.

구분	계	100kg/시 미만	100kg/시 ~200kg/시	200kg/시 ~2톤/시	2톤/시 이상
계 (비율, %)	14,791개 (100)	14,059 (95.0)	286 (2.0)	353 (2.4)	93 (0.6)
생활폐기물	4,529개	4,317	136	63	13
사업장폐기물	10,262개	9,742	150	290	80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경우 공공과 민간부문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및 퇴비화시설의 총 시설규모(233개소)가 1일 5천여톤으로 발생량 11천톤의 47.3%에 불과한 실정이다.

재활용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유 재활용품 수거관련시설은 수집운반차량 4,132대, 캔압축기·선별기 등 관련장비 1,556대, 집하선별장 238개소 등으로서, 수집운반차량중 재활용전용은 34.6%인 1,431대에 불과하고, 집하선별장중 자동화시설을 갖춘 곳은 18개소(7.6%)에 불과하다. 이렇게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의 공공처리시설은 농촌폐비닐 처리공장 8개소, 폐플라스틱 중간처리시설 등 총 21개이다.

제2장 폐기물관리 여건과 폐기물관리정책 과제

금년은 21세기를 시작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때인 만큼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침 지난 90년대의 폐기물관리정책을 이끌어 온 국가폐기물종합계획이 금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천년의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폐기물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혹자는 현재의 폐기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을 계속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새로운 정책의 개발 못지 않게 기존 정책을 내실화하고 현실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환경과 경제는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될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만큼 금년도의 폐기물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선 올해의 경제동향을 올바르게 직시해야 한다. 올해의 우리 경제는 지난 해 말부터 닥쳐오고 있는 경기하강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제2의 경제위기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번 IMF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부도가 속출함에 따라 산업폐기물의 불법투기 현상이 기승을 부린 만큼, 이번에는 미리 산업폐기물의 불법투기를 예방하는 장·단기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보존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재활용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활용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재활용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침체되어 가는 국가경제를 일으켜 세우는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쓰레기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종이 봉투 하나라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이 생활속의 실천문화로 정착될 때 가능하다. 따라서 쓰레기 줄기가 생활속의 실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언론, 네티즌 등과 적극 협력하여 다양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끝으로 폐기물관리 분야에도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경영혁신을 이루어 폐기물관리시스템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먼저 국가의 위탁을 받아 환경관리공단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온 전국의 5개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을 민영화하고, 농촌폐기물의 수거와 처리업무에 치중하여 온 한국자원재생공사를 국가의 재활용정책을 뒷받침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새롭게 출범한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도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여 시민의 사랑을 받는 조직이 되도록 할 것이다.

제3장 폐기물관리정책 추진방향

1. 21세기 폐기물관리 정책 방향 수립

지난 '90년대의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이 금년에 끝나는 만큼 새로운 장기종합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국가폐기물종합계획은 다가오는 10년의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새천년의 폐기물관리의 정책방향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이 새천년의 폐기물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되기 위해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폐기물통계조사에 의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96년도에 처음 실시한 바 있는 폐기물센서스 조사를 새로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2002~2011)」의 수립

새로운 국가폐기물종합계획에는 지난 10년 동안의 폐기물 발생량 추이, 성상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의 쓰레기 발생량 및 성상변화에 대한 전망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발생한 쓰레기를 소각, 매립, 재활용 등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처리방법별 관리목표가 제시되고, 향후 10년 동안 폐기물관리정책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점추진과제와 추진전략이 설정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계획이 장미빛 청사진에 머물지 않고 현실성을 갖춘 계획이 되도록 이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예산 조달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담겨지도록 할 것이다.

이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금년도 상반기까지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개최 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것이다.

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폐기물 통계조사 추진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의하면 5년마다 전국적인 폐기물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근거에 기초하여 지난 '96년 최초로 폐기물센서스를 시작한 바 있다. 이 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폐기물통계 조사와 달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원별 발생량을 정확히 조사하고 폐기물을 직접 채취하여 이화학적 분석까지 실시한다. 이 조사는 장기적인 폐기물관리 계획을 작성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 조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한국환경평가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폐기물통계조사에 관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한 다음 지방대학,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등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2. 쓰레기 줄이기 실천문화 정착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에 온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나, 지금까지는 시민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정부주도의 일회성 홍보 및 캠페인에 의존하여 왔다. 각종 환경단체,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에서 쓰레기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왔으나 이들의 활동을 결집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였다.

앞으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1회용품 줄이기,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가. 1회용품 안쓰기 실천운동 전개

'98년 2월부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유상판매제도를 실시하는 등 1회용품 규제제도를 강화하여 오고 있으나, 아직도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고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부족하여 1회용품 줄이기가 생활속의 실천문화로 정착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지난 해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대표들이 모여 1회용품 안쓰기 결의대회를 개최한 만큼, 금년도에는 유통업체에서 장바구니 이용고객에게 사은쿠폰을 제공하거나 전용계산대를 설치하는 등 장바구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종량제 봉투에 상품을 담아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재는 사업자가 1회용품 규제법령을 위반하여도 3개월까지 이행명령을 내린 후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규제의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금년부터는 1회용품 규제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단체와 협조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시민감시 및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1회용품 줄이기를 민간주도의 시민실천운동으로 승화·발전되도록 할 계획이다.

나. 환경친화적인 음식문화 만들기 운동 전개

음식물쓰레기는 생활쓰레기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그 발생량이 많고, 우리나라 특유의 국물문화와 푸짐한 상차림 문화로 인하여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의 전통적인 음식문화를 바꾸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확충,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단체가 앞장서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천운동의 하나로 2000년도에 YWCA 등 민간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을 적극 실천하는 우수 음식점 225개소를 “환경사랑 음식점”으로 선정한 바 있다. 앞으로는 ‘환경사랑 음식점’으로 선정된 음식점에 대하여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환경사랑 음식점을 일반음식점 뿐만 아니라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까지 지정하여 환경친화적인 음식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분리배출 대상지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의 확대 추진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선 한정된 공무원에 의한 지도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하에 지난해 시민들의 신고시 과태료 부과액의 8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의 시행 전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웃간의 감시로 사회 분위기가 삭막하게 된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국토환경 보전이라는 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는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에만 적용되는 관계로 적용대상이 협소한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는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 1회용품 규제 위반의 경우에도 이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3. 생산자 중심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추진

19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이래 소비자와 자치단체 등 정부에서는 쓰레기 발생억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등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생산자는 타이어, 가전제품, 합성수지 등 특정 품목에 대한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과 같은 재정적 부담이외에는 특별한 역할이 없으며, 폐기물 예치금과 부담금마저도 실제 회수처리비의 일부만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폐기물관리에 있어 생산자의 역할을 중시하여 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책임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생산자에게 이러한 책임을 부과할 경우 제품의 설계 및 제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고려하게 되어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 및 재활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선진국형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0년에 가전제품과 형광등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범실시를 위해 환경부는 가전업계 및 형광등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금년도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제도적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도 시행을 목표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재활용 대상품목 설정 및 재활용의무량 산정 등의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사항결정에는 산업계 및 관련부처와의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업계 및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 민간참여 및 공공기관 혁신으로 폐기물관리의 효율성 제고

농촌에서 하우스, 멀칭용 등으로 농업용 비닐이 매년 98천톤이나 사용되고, 사용된 후 발생하는 폐비닐은 흙 등 이물질이 포함되어 약 289천톤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농촌폐비닐이 적정처리되지 않을 경우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을 일으키는 등 그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는 습식처리방법으로 농촌폐비닐을 처리하여 왔으나, 이 방법은 다른 처리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처리되지 않은 폐비닐이 계속 누적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여 왔다.

또한 생활폐기물 관리는 자치단체의 기본책무임에도 영농폐기물 수거업무만을 한국자원재생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폐기물관리체계와 맞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농촌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면서도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는 경제적인 처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농촌폐비닐 처리의 최적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으며, 동 연구결과에 따라 농촌폐비닐 처리방식을 간이처리후 압축보관하는 방법, 시멘트킬른의 연료 및 원료화하는 방법, 소각시설에 위탁처리하는 방법 등 다양한 처리방법을 개발하고 효율성이 입증된 처리방법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농폐기물 수거업무를 민간 또는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국가에서 직접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민간의 폐기물처리를 지도·감독하여야 할 국가와 민간업체 사이에 폐기물의 수탁을 놓고 경쟁관계가 형성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의 효율화, 환경산업시장 확대, 외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현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화성, 군산, 광양, 창원, 온산 등 5개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의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5.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재활용 산업 활성화 추진

우리 나라 재활용 산업은 아직도 열악한 여건에 처해 있다. 재활용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은데다 품질마저 일반제품에 비해 떨어지고, 더 나아가 새 것, 좋은 것만 선호하는 우리의 소비문화로 인하여 재활용제품에 대한 수요기반이 매우 약한 실정이다. 아울러 경기변동에 따라 원료가 되는 폐자원의 가격이 불안정하고, 재활용 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이어서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선 국가가 정책적으로 재활용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영세한 재활용업체의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장기 저리로 자금을 융자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단체에서는 재활용품 집하선별장이 부족한데다 집하선별장이 있는 곳도 수작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재활용품의 품질이 떨어지고 인건비 과다로 인하여 재활용품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여 자치단체의 재활용품 집하·선별장을 현대식 선별장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과 재활용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공급확대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재활용제품에 대한 수요 창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정부, 정부산하기관 등에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재활용품 구매가 민간부문에서도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우선 구매대상으로 지정된 재생용지 등 145개 품목 외에 GR, 환경마크 인증품목에 대하여도 우선구매 대상으로 새로이 지정할 계획이다.

6. 산업 폐기물의 불법투기 및 부적정처리 방지대책 추진

지난 해 하반기 들어 시작된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될 경우 IMF체제하에 발생하였던 산업폐기물 불법투기나 부도업소의 방치폐기물 문제가 재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폐기물 불법투기 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업체에 대해 자치단체, 지방환경청, 환경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특별 지도 점검과 같은 단기적인 대책과 더불어 산업폐기물의 불법 투기 요인이 되고 있는 제도상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배출자가 위탁처리할 경우 수탁업체의 불법 또는 부적정 처리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배출자가 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할 때 적정처리보다는 처리단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업체는 수탁물량 증가를 위해 적정가격 이하로 계약함으로써 산업폐기물의 불법 또는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배출자에게 수탁자의 불법처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한편 유해성이 크고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이 큰 지정폐기물, 장거리이동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각 단계별로 적법처리를 입증하도록 하여 폐기물의 처리경로와 행방을 투명하게 추적·확인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 증명제를 시행중에 있다.

이러한 폐기물처리 증명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처리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폐기물적법처리 입증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일부 업체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가. 폐기물공공처리시설의 확충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이나 재활용 이후에도 최종적으로 남는 폐기물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자 한다.

특히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 등 우리 나라의 어려운 매립지 여건을 고려할 때 소각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소각시설이 주변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주거밀도가 낮거나 그린벨트 지역 등 인접 자치단체의 경계지역에 단독 소각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대부분이 인접 자치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단독시설을 설치할 경우 광역시설 보다 설치 및 운영비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소각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만큼, 광역으로 건설하는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소요 건설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강화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일 50톤 이상의 대형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하여 선진국 수준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소각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는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 중소형 소각시설에 대하여 배출실태를 조사한 바 있으며, 이 조사를 토대로 시간당 0.2톤이상의 소각시설에 대하여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구 분	신설시설(ng)	기 존 시 설(ng)	
		2001.1.1~ 2005.12.31	2006.1.1이후
시간당처리능력 4톤이상	0.1	20	1
시간당처리능력 4톤미만~2톤이상	1	40	5
시간당처리능력 2톤미만~0.2톤이상	5	40	10

한편 상수원 상류지역 및 월드컵 경기장 주변 등에 위치하고 있는 비위생매립지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바 지속적으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4장 결 어

지금까지 금년도에 추진할 폐기물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때 현대사회의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현하는데 작은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되 그래도 발생한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완벽히 처리하는 폐기물 정책을 통해 쓰레기 줄이기가 생활속의 실천문화로 정착될 때, 우리의 환경은 더욱 더 푸르고 깨끗하게 바뀌고, 기업은 자원절약과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의 후손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주어 미래세대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